

‘드루킹 특검’ 지방선거 미풍 될까 강풍 될까

내달 하순 본격 수사...민주 “정권과 무관” 영향 가능성 일축

김경수 의혹 노출해 경남 민심 자극...한국당 장기 파급력 기대

국회가 21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법안을 의결, 6·13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안에서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특검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 4명을 추천하고 야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그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야당이 최종 추천한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

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이다.

특검 수사는 국무회의의 특검법 공포안 의결, 특별검사 임명, 특검팀 구성 등 준비를 걸쳐 다음달 하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에 60일로 하되 30일간의 차례 연장(최장 90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드루킹 특검이 당장 6·13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여론을 흔들 가능성이 있어 여당으로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드루킹 특검이 당장 보다는 장기적으로 정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민심 동향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야당 주장처럼 ‘정권 핵심 인사, 나아가 정권이 연루된 범죄’가 아니라는 확신을 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고는 하나, 실상보다 훨씬 부풀려져 공격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높은 대통령·정당 지지율, 강렬한 한반도 평화무드가 특검 여파를 상쇄하고도 남을 거라고 기대한다. 다만, 특검을 통해 새로운 의혹이 나타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민간 영역에서 발생한 온라인 댓글 범죄일지라도 그 상황이 심각한 경우 여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애초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면서 특검을 추진한 게 아니므로 선거 유·불리 역시 따져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그러나, 드루킹 특검이 풀고 올 파급력을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다. 특검 수사 개시 시기가 비

록 선거 이후이지만 이미 ‘특검 국면’에 들어선 것 자체로 야당은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는 판단이다. 나아가 특검 국면과 맞물려 김경수 후보의 의혹이 한층 빈번하게, 또한 강도 높게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경남 민심이 더 자극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당은 다만, 대선 불복으로 비추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보고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때문에 드루킹 특검이 광주·전남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든가 일반적 관측이다. 여론의 지지율뿐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환영 강도가 어느 지역보다 높기 때문이다.

심지어 드루킹 특검을 정경화하는 것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커서 야당 후보들이 이를 선거 재료로 이용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6·13 선거 현장

광주시장·전남지사·구청장 후보

이용섭 “경선과정 고소·고발 조건없이 취하”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21일 “경선 과정에서 제기한 고소·고발을 아무 조건 없이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용섭 후보는 자신의 전두환 정권 시절 청와대 근무 경력과 관련, 5·18 역사 왜곡이 담긴 전두환 회고록 출판 금지 소송과 전두환 사자명에 훼손 소송을 이끌고 있는 김경호 민병 광주전남지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전두환과 싸우고 있는 사람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는 비난을 샀다. 이 후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고소·고발 취하는 지역사회가 분열 없는 통합을 이루기 위한 대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록·김경수 후보 전남-경남 상생정책 협약



더불어민주당 김영록(사진) 전남지사 후보와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21일 경남 하동군 화계면사무소에서 ‘전남-경남 상생발전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후보는 영호남 간 교류 확대를 위해 목포에서 남해·통영·거제를 거쳐 부산까지 이어지는 해안관광도로 건설과 무안공항에서 진주·창원·김해를 경유해 부산으로 가는 남해안고속철도의 조기 개통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당선되면 하동에 티타늄 등을 활용한 신소재 부품산업단지과 여수·광양에 소재부품단지를 연계한 소재부품 광역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진주와 사천의 항공우주·세라믹 산업을 연결하는 ‘여수-광양-하동-진주 남해안 광역경제권’도 구축하기로 했다.

법원 “김병내 남구청장 후보 단수추천 문제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남구청장 후보로 김병내 전 청와대 행정관을 단수 추천한 데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21일 “최진 예비후보가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공직선거 후보추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이유없다’며 기각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병내 후보를 심사하면서, 가·감산을 잘못 적용했거나 객관적 타당성을 잃은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공천 적합도 조사결과 김병내 후보는 43.2%, 최 후보는 12.5%로 30% 이상의 격차가 발생해 (김 후보를) 단수 추천한 행위가 객관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문인 “현장목소리 정책 반영 제도적 장치 마련”



문인 더불어민주당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22일 북구복지연합과의 간담회에서 “실제 복지현장에서 활동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토론회를 개최해서 입법과 행정,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제도적 통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북구복지연합의 10대 정책제안에 대한 질의답변서를 전달하면서 “공약이 마련하는 것 보다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주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공약의 이행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복지비중이 70% 달하는 상황에서 예산정책에도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표정관리’ 국회 본회의에 자유한국당 홍문중, 염동열 의원(오른쪽)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21일 두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탄국회’ 가재는 계편

홍문중·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민주당서도 이따표

자유한국당 홍문중·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제식구 감싸기’와 ‘방탄국회’ 논란이 일고 있다.

홍 의원은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 등으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특히 2012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이 외부에서 기부받은 ‘서화 구입비’ 약 1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14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이후 첫 번째로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갔으나 부결됐다. 국회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19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2014년 9월3일)

이후 3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는 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으나 임시국회 회기 만료로 표결이 진행되지는 않았으며 두 의원은 올 1월 구속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반대표가 한국당 의석수(113석)보다 훨씬 많았다는 점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부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는 반대가 한국당 의석수보다 59표나 많아 지지 않은 ‘이따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하고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이끌어갈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로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것은 자기당적이고, 변명의 여지도 없다”며 “국민께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민주 정영덕 무안군수 후보 공천 취소

더불어민주당은 정영덕 무안군수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했다.

민주당은 21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무안군수 후보자 추천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당 전담폭력대책위원회는 정 후보의 미투 폭로에 대한 조사 결과를 최고위에 보고했다. 최고위는 전담폭력대책위 보고 내용을 토대로 후보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는 자신을 포함한 4차 경선에서 득표를 1위를 기록해 무안군수 후보 공천을 받았지만, 특정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문자메시지 내용이 공개돼 의혹을 샀다. 정 후보 측은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고 반박해왔다.

민주당은 새로운 후보 추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역정가에서는 후보자 등록이 3일 밖에 남지 않아 경선이 아닌 전락공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민주 예비후보들 공약이행 결의

더불어민주당 강진군수·도의원·군의원 예비후보들이 6·13지방선거 공동 공약을 추진하고 공약이행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승욱 강진군수 후보는 지난 19일 강진연락소에서 민주당 도의원·군의원 후보·비례대표 등 10명과 함께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후 추측에 따르면 이날 참석자들은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 같은 강진지역의 현안해결을 위해 공동 공약을 개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마을단위 특성까지 세세하게 반영한 구체적인 공약들이 다들 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지역 민주당 예비후보는 이승욱 강진군수 후보를 비롯해 차영수·김용호 도의원 후보, 윤기현·위성식·한상준·문춘단·김명희·서순선 군의원 후보, 김보미 비례대표 후보 등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대통령령 제28838호 농업진흥구역
(2018년 5월 1일 시행 대폭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가능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 땅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3,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